

참여정부의 복지인식 변화에 거는 기대

노원명(매일경제 사회부 기자)

먼저 책 얘기 하나. 네티즌을 상대로 요사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마도 '왜도난마 한국경제'가 상위 순번에 오를 것 같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 교수와 정승일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가 한국 경제 주요 현안들에 대해 나눈 대화를 엮은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읽고 감동한 나머지 경제보좌관실에 관련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관료들 중에 이 책을 줄 쳐 가며 읽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책은 화제가 됐다. 김근태 장관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독후감을 올리는데 이어 출입기자들에게 추석선물로 한권씩 돌렸기 때문이다. 덕분에 필자도 제 돈 들이지 않고 책을 볼 수 있었는데 감상평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매우 흥미로웠다'.

책은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신념이 현실에서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설명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식 경제발전 모델이 당시의 한국으로선 '최상'의 방식이었으며 재벌체제 역시 나름의 합리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또 IMF이후 우리나라에 일종의 선(善)처럼 강요돼 온 외국 자본이 실상은 국민경제에 해로운 때가 많다고 비판한다. 동시에 국가가 사회복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으며, 무엇보다 각 이해주체간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 책은 현 정부의 '정책교과서'로서의 위상을 특특히 과시했다. 노 대통령이 연석회의의 모델로 예를 든 것이 이 책에서 자세히 소개된 스웨덴의 '잘츠요바덴(Saltsjobaden) 협약'이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책에서 참고한 것은 이뿐만이 아닌 것 같다. 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크게 늘려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시장 근본주의를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복지 서비스와 교육, 사회안정 서비스에 있어 큰 정부, 개인권리와 시장에 대한 간섭에 있어 작은 정부라는 균형 잡힌 정부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 얘기를 장황하게 꺼낸 것은 복지 서비스에 있어 큰 정부가 되겠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 때문이다. 그동안 현 정부가 정치부문에 표방해 온 ‘진보성’과는 대조적으로 경제영역, 특히 복지 쪽에서 보여준 정책은 썩 ‘진보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복지를 성장과 대체점에 놓인 ‘파이 나누기’로 인식해 왔다는 점에서도 현 정부와 과거 정부 사이에 두드러진 차별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김근태 장관은 취임 후 줄곧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 왔지만 경제부처의 성장우선 논리에 밀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는 관련통계에서도 입증된다.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7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8만명과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372만명, 잠재적 빈곤층 206만명 등을 포함한 수치다. 이같은 빈곤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50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치보다 훨씬 많아 충격을 줬다.

복지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도 현 정부 들어 몇 차례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12월 대구 불로동에서 발생한 4세 남아 사망 사건. 불안정한 소득과 질병에 노출된 한 차상위 계층의 절망을 돌아보기에 우리사회의 사회복지 그 물망은 너무 성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도시락 사건은 또 어떤가. 한 네티즌의 제보가 없었다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껏 문제의 그 도시락을 먹고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달 당정이 내놓은 ‘희망한국 21- 함께하는 복지’라는 제목의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은 노무현 정부의 변화된 복지인식을 엿보게 하는 바로미터다. 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차상위 계층의 주거, 의료, 보육, 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빈곤 예방, 인구특성별 지원대책 강화 등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 종합적 사회안전망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또 더 이상 사회복지 지출은 낭비가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점차 개선되는듯 하던 빈곤율과 빈부격차가 갈수록 악화되고 사회 양극화가 구조화 되는 현실에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는 분석이다.

당정의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관찰해 보건대 적어도 현 정부는 복지에 대한 투자가 ‘성과물 나눠 갖기’가 아니라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이것만 해도 대단히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쾌도난마 한국경제’가 지적하듯 복지는 빈자에 대한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가 원활히 굴러가려면 반드시 갖춰져야 할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불안한 노후와 질병에의 공포를 오직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회에서 소비는 덕목이 될 수 없다. 소비가 기피되는 분위기에서 내수창출은 난망한 일이고 수출만으로 지탱되는 경제는 한계가 있다.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수출호황을 맞고 있음에도 경기가 전반적인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이런 요인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최근 필자가 만난 중견기업의 한 오너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소득 1만불 수준에서 정체된 이유를 아는가. 복지가 너무 좋아져서

그렇다. 예전에는 자기 한몸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굶어죽어야 하는 사회였다. 건강보험은 취약하고 국민연금같은 노후대책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 뼈 빠지게 죽어라 일할 수 밖에. 그것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원동력이었다. 난 가끔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그리고 복지 확대가 반갑지만은 않다.”

19세기적 자유시장주의를 떠올리게 하는 이 말을 듣고 필자는 그저 웃고 말았다. 앞으로 그를 다시 만나게 되면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